

# “내 땅 통행금지” 도로 막은 주민들

### 새마을 운동 등 보상 없이 개설 ... 소유권 분쟁 광주 500여 건 시·구청 토지 완전 매입엔 수백억원 예산 필요 ... 엄두도 못내 동구청 인근 ‘개인 사유지’ 현수막 걸고 이틀간 소동 벌이기도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동구청과 KT호남권고객센터 건물간 도로(제봉로 82번길)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해당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민 A씨와 B씨가 “개인 사유지입니다”라고 쓴 붉은 현수막(4m)으로 도로를 막아선 것이다. 차량 통행이 막혀 정체가 빚어지자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들이 “형법(일반교통방해)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A씨와 B씨는 20여분 만에 현수막을 자진철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틀날 오후 또다시 같은 행위로 동구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17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공공도로 중 사유지가 포함돼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500여건에 달한다. 동구 사례처럼 길들이 깊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도로에 개인 땅이 다수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 등 개발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수십년 동안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게 관행화 됐다.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했을 때 토지 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5년 이내 기간에 소송을 걸어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시나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줄 때까지 매달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는 방식이다.

동구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서석초부터

동구청까지 90여m(716m) 구간이며 토지 용도는 ‘도로’로 돼 있다. 소유자들은 토지를 1998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유자들은 5년 마다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5년치 사용료 1500만원을 받아 왔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땅을 매입해줄 것을 촉구하다 동구가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길을 막고 나선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도로’로 돼 있어 도로법(제41조)상 구청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며 “원칙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도로 내 사유지는 모두 217곳(4만1000㎡)에 달한다. 구가 관할하는 전체 도로 면적(109만8000㎡)의 3.7%로, 전체 매입금액은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구는 소송을 통해 1년 단위로 매월 12명(12필지)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전체 도로 184만7450㎡ 중 사용료 지불 면적은 6952㎡(0.3%)에 달한다. 남구에서는 도로 내 사유지 46건에 대해서는 정기(분기·연·월) 지급, 11건은 일정기간 정액을 물고 있다. 14건은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북구도 매년 10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40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다. 금액은 1년 단위로 적게는 22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다. 광산구도 16필지(4881㎡)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내고 있다.

북구와 광산구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마련해 1~3필지씩 매입해 사용료 지불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구청과는 별도로 광주시가 관할하는 도로 내 사유지도 1815필지(47만165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토지 3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면적은 991㎡ 규모다.

광주시와 5개구는 도로 내 사유지의 완전 매입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 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공원 등에도 개인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도로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동구청에 매입을 요구하며 현수막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iknai@kwangju.co.kr

## 오세인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

제42대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오세인(52·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오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거운 짐을 맡겨 놓고 떠나는 듯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다”고 밝혔다.

오 고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퇴임 후 한달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무엇을 할지 고민해볼까 한다”면서 “올 가을부터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지낼 생각”이

라고 말했다.

오 고검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받았지만, 동기인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이 낙점됨에 따라 최종 후보자에 오르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주민 공동소유 야산 임의 처분” 완도 경찰 수사 착수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이 주민 공동 소유의 야산을 임의로 처분해 수 억원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완도군 신지면에 사는 주민 A씨는 지난 11월 전 마을이장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엔 B씨 등이 지난 2월 마을주민 공동 소유의 야산(1만4545.5㎡·4400평)을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근 마을에

사는 C씨와 10여억 원에 계약한 뒤 선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야산은 신지 명사십리 주변 산으로 평당 3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경찰은 B씨 등이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야산을 처분했는지와 선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 친엄마는 동거남에 눈멀고 경찰은 학대 가능성 눈감고 6살 어린이 끝내 실명

### 첫 치료 조선대병원 의사 학대 의심 경찰에 신고 수사 미적에 또 폭행당해

경찰의 치밀한 수사만 있었더라면 친엄마의 동거남으로부터 수개월간 폭행당한 ‘6세 어린이’의 실명(失明)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어린이를 첫 치료한 조선대병원 의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아동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실명을 유발한 2차 학대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6)군의 친모 C(35·구속 기소)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C씨는 동거남 L(27·구속 기소)씨에게 폭행당한 A군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28일 광주 한 대학병원 의사가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동거남 L씨에게 5번째로 맞은 A군은 오른 팔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A군을 치료한 조선대 학교 의료진이 “팔에 멍이 있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광주동부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신고 접수를 받은 광주동부경찰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을 방문해 조사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L씨의 아동학대를 막지는 못했다.

동부경찰은 당시 “새벽에 배란대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친모 C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판단, 목포경찰에 ‘세 차례 목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유, 두 달간 유치원을 결석한 경위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측이 ‘안전사고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목포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전남지방경찰청의 설명이다.

결국 조선대병원 의료진의 의견만 제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 6살 어린이가 ‘실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한 달도 채 안된 같은 해 10월 20일 다시 폭행을 당한 A군은 안면부가 골절되고 양팔과 다리가 부러졌다. 간 손상과 담도관 파열 등 내상도 입었다. 6살짜리 어린이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10여일간 그대로 방치됐다. 친엄마와 동거남은 10월 29일 A군을 전남대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한 탓에 A군의 왼쪽 눈은 결국 실명됐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서 친모 C씨와 동거남 L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와 목포지원의 재판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L씨는 동거남의 아들 A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찌질음 얼음주머니나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8차례다.

A군은 친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이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했지만, 끝까지 친엄마만은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재판 전 경찰 조사에서도 A군은 L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친엄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군은 또 L씨로부터 맞을 때에도 엄마를 격정해 고통을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군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생활하고 있으며, 쾌활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을 잘 따르고 웃음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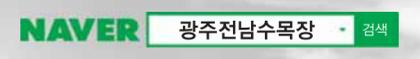
## 먹고 싶은데 종업원 없어...편의점서 김밥·육포 훔친 여중생

○...교사 부모를 둔 여중생이 등굣길에 편의점에서 김밥과 육포 등 먹을거리를 훔쳤다가 경찰서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A(15)양은 지난 5일 오전 8시께 광주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 육포와 김밥, 과자 등 6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뒤 10여일 뒤 해당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다가 들키.

○...교사 부모 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양은 경찰조사에서 “간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했는데, 종업원이 없어 호기심에 김밥 등을 가방에 넣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이룸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